

6313억 투입해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집중'

농식품부, 물류비 지원 폐지 대신 수출 지원 예산 전년비 3.1% 증액 통합·관리하는 수출전문조직 육성 신선농산물 특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분야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조직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능형농장·농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65억원에서 내년도에 245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도 올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소스.ag를 적용한 스마트팜 모습.

대폭 늘렸다.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조절(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 3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렸다.

아울러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 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45억원→62억원)하고, 스마트

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 4억원도 신규 반영했다.이밖에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 19억원을 배정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며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농진청, 필리핀에 채소 생산기술 전수

코피아 필리핀 시범마을 인프라 준공

농업인 500여 명이 자리했다.

농촌진흥청은 5일(현지시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필리핀센터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마을 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필리핀 채소 비가림시설 및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시닐로안 시범 마을에 구축한 기반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시범 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등 농진청 대표단과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를 비롯해 필리핀 도밍고 팡가니 반 농업부 수석 차관, 라구나주 주지사, 시닐로안 시장 등 주요 인사, 현지

기반시설은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6x40m, 240㎡) 8동, 육묘용 온실(6x16m, 96㎡) 1동, 수확 후 관리실(저온저장고, 창고 등)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트랙터, 다목적관리기, 고성능 동력분무기 등)를 제공하는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농진청은 이번 기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채소재배 기술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라구나주 시닐로안 지방정부 외에도 퀘손주 록반 지방정부와 누에바에시아주 자라곤자 지방정부 등 총 3곳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차상근 기자

“수출초보社 시장 다변화 위해 함께 땀 흘릴 것”

산업부, 브랜뉴머시너리 기업 방문 인도·UAE 등 신규 시장 중심 지원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활용 계획

정부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이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브랜뉴머시너리 기업을 방문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랜뉴머시너리는 수소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코딩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다. 당초 내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시스

꾸준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간접수출을 거쳐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2020년부터 해당 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타깃 시장 설정과 시장별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다카, 뉴델리 등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지

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유통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 결과다.

산업부는 인도, UAE 등 신규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초보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실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함께 발로 뛰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해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시스

수산물 5만원어치 사면 2만원 상품권 지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 확대

만 9월11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요건이 5만 원으로 내려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에서 환급행사에 대해 언급하고,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

현재 전통시장·수산물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으로 구입하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상품권 금액은 2만 원이다.

내주 초부터는 2만5000원~5만 원 미만 구입이 환급 1만 원, 5만 원 이상 구입 시 환급 2만 원으로 최소 구매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NASA 등 제주시 기후변화 대응 논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학술대회’

CAP)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6-8일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제14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30개 기관,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일 과학원에 따르면 30개 기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해 미국 국립대기과학센터, 유럽 우주국, 독일 항공우주센터 등이다. 또 왕립 네덜란드 기상연구소와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 일본 환경청, 중국 과학기술대,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

올해 학술대회에선 지난 2020년 2월 발사한 우리나라 환경위성과 미 항공우주국의 템포,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5P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산출물의 연구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산출물을 활용한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미 항공우주국의 배리 리퍼 박사가 미국의 템포위성의 현황 △네덜란드 왕립 기상과학원의 페파인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자료의 개선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소개·발표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개정안 이달 발의

산업부,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 논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

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지규제와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